

여야 대권주자·대표들 개헌 반응

										
문재인	안철수	손학규	박원순	안희정	김무성	유승민	이정현	추미애	박지원	김종인
대통령 개헌 제안 블랙홀이 필요한가	선거제도 개편이 개헌 전 먼저 할일	7공화국 열기위한 필요조건의 하나	재집권 생각밖에 없나 “참 나쁜 대통령”	국면전환 이용말라 대통령 논의 빠져야	애국의 결단 환영 임기 내 어려울 것	정치적 계산에 따른 개헌은 아합이다	개헌은 국가 어젠다 정략 이용은 안 돼	3선개헌이 떠올라 정권연장 위한 음모	대선 전 물리적 불가 정략이 숨어있다	개헌 결심은 옳다 최순실 사건과 별개

野

잠룡들 “우병우·최순실 덮으려는 건가”

개헌까지 ‘산넘어 산’

발언 의도 경계…“임기말 대통령은 개헌 논의서 빠져야”

김무성 특위 구성 제안…“내년 4월12일 국민투표 적합”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내년 대선을 노리는 잠룡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차기 대선 구도를 뒤흔들 수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우선 야권 대선 주자들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완수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박근혜표 개헌, 정권 연장을 위한 제2의 유신헌법이라고 만들자는 건가”라고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박근혜표 개헌은 안 된다. 개헌은 국민 삶을 낮게 만드는 민생 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개헌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 나쁜 대통령. 국민이 불행하다”며 “부도덕한 정권의 비리사건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지세요. 파탄 난 경제, 민생부터 챙겨주세요. 국민이 살아야 개헌도 있고, 정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는 “임기말 대통령은 현 개헌 논의에서 빠져달라”고 요구했다. 안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 개정 논의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지 말라”면서 “대통령은 의회 개헌 논의에 협조자의 위치에 서 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임기 말의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모양새를 취하면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해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임기 마지막 해에 개헌하시겠다는 건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 의혹 이런 일을 덮으려는 것 아닌지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등을 해야 한다”며“현재 양당 체제에 유리한 선거제제를 그대로 두고 개헌하겠다는 것은 민심에 정면으로 반해 양당 다선의원들이 다 해먹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정계에 복귀한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는 “개헌은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명운이 다한 6공화국을 바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권력구조를 포함해 정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결단”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와 행정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법국민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긴급 제안한다”며 “다음 대통령선거에서부터 (새 헌법이) 적용되기 위해선 내년 4월 12일 보궐선거가 국민투표에 가장 적합한 날짜”라고 제시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국면을 넘기기 위한 차원의 개헌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그는 이날 주일한국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순실, 우병우 의혹 등에 대해 단호히 처리하면 국면전환용이 아니라고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입장 자료를 통해 “개헌 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주도해서는 국민이 그 의도에 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전격 제안하면서 개헌 정치권이 개헌 논의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다만 실제 개헌에 이르기까지는 협협산중이다.

박 대통령은 물론 여야 정치권, 또 대선 주자들의 개헌에 대한 입장과 접근 방식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박 대통령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정치권이 순조롭게 ‘합의 개헌’을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거리다.

일단 여당인 새누리당은 “즉각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을 추진하자”며 개헌 논의를 당장이라도 시작하자는 입장이지만 야권의 입장은 다소 모호해 보인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보이면서도 논의 자체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의식하면서 개헌 특위 구성 등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면 전환이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면서 시간을 두고 대응할 듯한 분위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개정안 발의~국민투표 110일 소요…내년 1월까지 발의 돼야

개헌 절차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따라 개헌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이 300명인 만큼 151명 발의로 제안이 된다.

단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박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이 이뤄진다고 해도 박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개헌 절차 어떻게 되나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의 개헌안 발의

대통령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의 국회의원의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

헌법 개정안 공고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국회의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국민투표

국회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헌안 확정

대통령 공포·발효

대통령이 즉시 공포 공포와 동시에 발효

연말뉴스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헌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셈이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헌이 확정되며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은 일반 법률과는 달리 헌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내년 12월 20일에 제19대 대선이

있다는 점에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연말,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개헌안 발의 후 국민투표까지는 약 110일이 소요된다. 헌법에 명시된 개헌 절차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의 발의→국회의결→국민투표→대통령 공포 및 발효다.

박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완수를 위해 정부 내에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무조정실, 법무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의 관계 부처와 헌법 전문가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치권-청와대 주도권 싸움 예고

어느 당도 단독처리 불가

박근혜 대통령의 24일 임기 내 개헌 의지 표명으로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 간에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 개헌특위는 그동안 개헌 논의가 분출될 때마다 거론돼온 ‘논의 방식이지만 1987년 개헌 이후에는 실제로 구성된 적은 없다. 그동안 술한 개헌 제안들이 쏟아졌지만 청와대와 여야 정당, 차기 대선주자들의 이해

가 엇갈려 개헌특위 구성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상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의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0대 국회는 그 구성상 어느 당도 개헌안 단독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야의 사전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특히 청와대가 개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경우 야당과 여당 내 비주류의 반발이 예상돼 또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박지경기자 jkpark@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상자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4.7% ~ 4.9%

대출기간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